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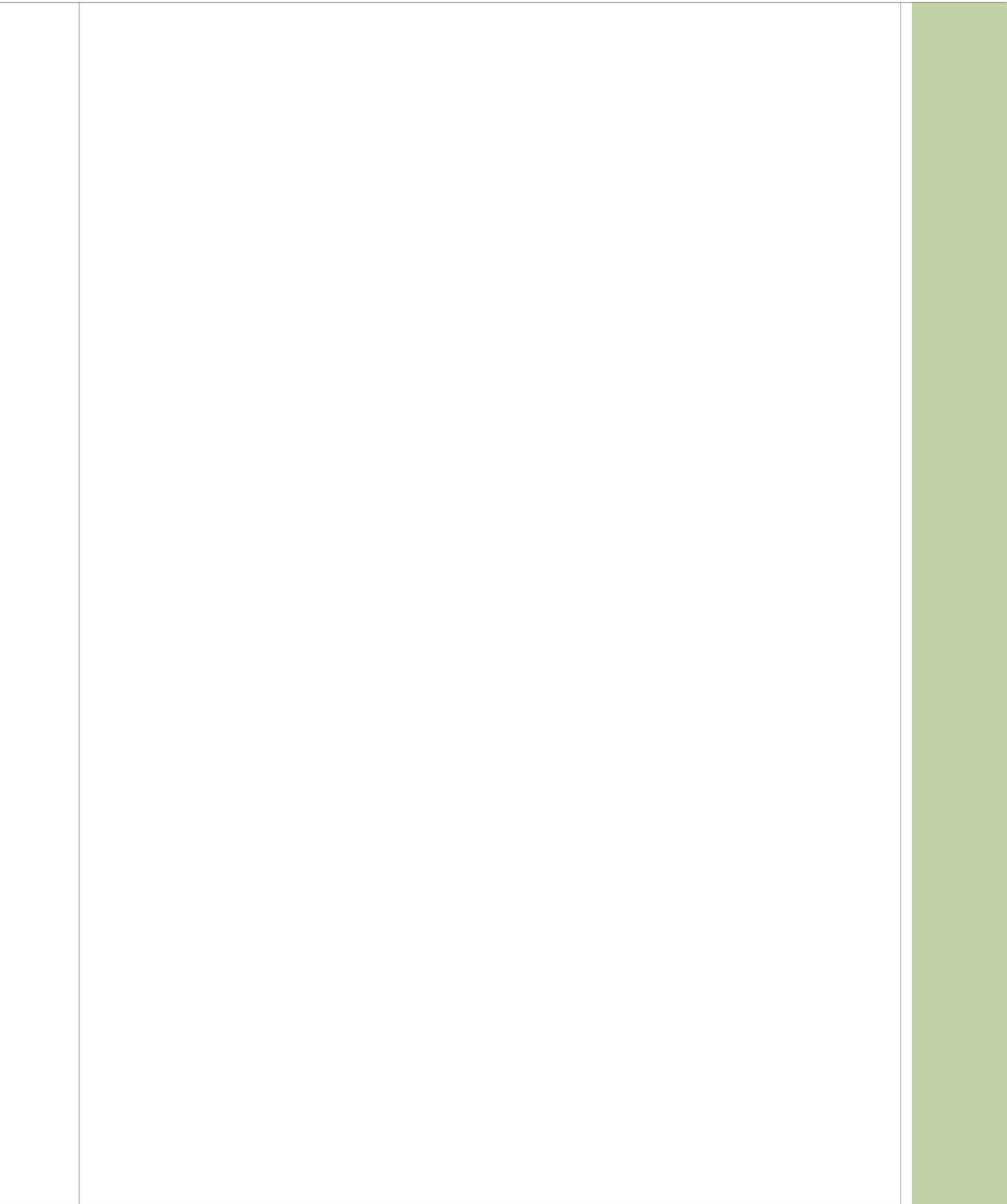


제2장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

제1절 남북정상회담

제2절 남북정상회담 이전

제3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2장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

2007년 한 해 동안 남북대화는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 55회 개최되었다. 정치회담 13회, 군사회담 11회, 경제회담 22회, 인도회담 3회, 사회·문화회담 6회 등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상반기에는 북한의 핵실험('06.10)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 타개에 목표를 두고 회담재개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07.2.27~3.2)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의 백화원 초대소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회담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남북총리회담 개최 합의로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중심협의체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총리회담」으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남북간 협의의제의 범위가 그만큼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2.15)을 시작으로 7개월간

중단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고, 그 이후 개최된 제20차 및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촉구, 경협사업 활성화, 인도주의 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추진방향과 과제가 제시되었고 남북총리회담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사분야에서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00.9.25~26, 제주) 이후 7년 만에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재개되었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군사실무 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경제분야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포괄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선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가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산하에 철도·도로, 조선 및 해운협력 등 8개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인도·사회문화분야에서는 두 차례의 남북직접접촉 및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확대실시와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인도적 문제해결에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백두산관광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남북응원단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참가 등에 합의함으로써 사회문화분야 회담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특히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과학기술·체육 등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도 남북회담 개최 현황

구분	내용	개최 횟수	
정치분야 (13건)	2007 남북정상회담	1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남북특사접촉(제1차~2차)	2	
	2007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1	
	2007 남북정상회담관련 분야별 실무접촉(제1차~2차)	2	
	남북총리회담(제1차)	1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제1차~3차)	3	
	남북장관급회담(제20차~21차)	2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1	
군사분야 (11건)	남북국방장관회담(제2차)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5차~7차)	3	
	남북군사실무회담(제29차~35차)	7	
경제분야 (22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3차)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제5차)	1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제1차~2차)	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제2차~3차)	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제1차~2차)	2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제3차)	1	
	중유 5만 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제1차)	1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1차)	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제1차)	1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제1차)	1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제1차)	1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제1차)	1	
	남북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제1차)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제1차)	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1차)	1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제1차)	1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제1차~2차)	2	
	금강산관광 활성화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제1차)	1	
	사회문화분야 (6건)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제4차)	1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 남북실무접촉(제4차)	1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 실무접촉		1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실무접촉		1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1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		1	
인도분야(3건)	남북적십자회담(제8차~9차)	2	
	남북적십자실무접촉(제6차)	1	
합 계		55	

제1절 남북정상회담

1. 개최 배경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북핵문제가 해결의 방향에 들어서거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 왔다.

2006년 10월 북핵실험과 UN 안보리 제재조치로 냉각된 북미관계가 2007년 「2.13 합의」를 계기로 실천적 해결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BDA 북한계좌의 동결을 해제('07.4.10)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는 한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도 가동하였다. 북한은 이에 상응하여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IAEA 사찰단의 감시를 재개('07.7.14)함으로써 6자 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핵문제의 해결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도 정상화되어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07.2.27~3.2)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틀 속에서 제한된 경제·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한정되어 군사분야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북관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간의 만남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정세인식을 배경으로 정부는 2007년 7월 초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협의를 위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간의 고위

급 접촉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월 29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비공개 방북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1차 방북시(8.2~3) 북한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중대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하였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였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8월 3일 서울 귀환 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측 제의를 수용하였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재차 방북(8.4~5)하여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수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8월 5일 남북은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대해 합의하고, 국가정보원장과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2. 사전 준비

2007년 8월 8일 정부는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에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준비기획단」을 발족시켜 착실히 준비해 나갔다. 회담 준비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10회, 「준비기획단」 회의는 11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간 협력 하에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서 쌍방이 합의한 대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실무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14일 개성에서 남북 차관급 대표가 만나 정상회담 준비접촉과 의전·경호·통신·보도 분야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차관)	최승철(통일전선부 부부장)
대표	김웅희(통일부 국장) 박봉식(통일부 국장)	전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 리 현(아태평화위 참사)

준비접촉에서 쌍방은 정상회담 준비에 따른 대표단 규모, 왕래절차, 체류일정 등 제반 절차문제들을 합의하였다.

준비접촉 주요 합의내용

- 대표단 규모: 수행원 150명, 취재기자 50명 등 총 200명
- 회담의제: 8.5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의제 설정
- 체류일정: 참관 등 구체적인 체류일정은 마련되는 대로 북측이 전달
- 왕래절차: 평양방문과 서울 귀환시 서해선 도로(개성 경유) 이용
 - ※ 대통령은 전용차량으로 방북(행사기간 내내 사용, 경호차량 수행)
- 선발대 파견: 35명, 대표단 방북 7일전 파견
- 편의보장·신변보장: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취재활동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 제공

준비접촉 기간 중에 대통령 의전과 경호, 통신, 보도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간 접촉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는데 의전분야는 대통령 방북에 따른 일정과 행사별 동선, 의전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였고, 경호분야는 차량 행렬과 숙소 및 행사장 경호, 비상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통신 분야는 서울-

평양간 직통전화 및 숙소 내 통신망·무선통신망 구성 등 통신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보도 분야는 생중계 방안, 행사장별 보도계획, 취재편의보장 내용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북한의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다. 8월 7일부터 18일까지 북한 지역내 집중호우가 내려 사망·실종 등 600여 명, 주택 파손 24만 세대, 이재민 100만여 명, 농경지 침수 20만여 정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8월 18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심각한 수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을 부득이하게 10월 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8월 20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의 요청을 수용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을 10월 2일에서 4일까지 개최하기로 북한에 제의하였으며, 북한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된 일정에 맞게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의전·경호·통신·보도에 따르는 절차문제들을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회담준비를 병행해 나갔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선발대 파견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선발대는 9월 18일에서 21일까지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인원 35명이 방북하였다. 1차 선발대의 임무는 그간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협의해 온 사항들을 타결짓고 숙소와 회담장, 행사장, 오만찬장, 참관지 등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였다. 9월 27일부터는 윤정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34명의 2차 선발대가 파견되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뒷받침하였으며, 회담종료 후 최종정리를 하고 서울로 귀환하였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원로급 인사로 구성된 통일고문 및 일반국민, 정치권 인사, 시민단체, 기업인, 국책연구기관장,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약 80여 차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각계 각층의 대북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회담준비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정상회담에

서 다루어야 할 의제, 회담진행시 유의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제시하였으며, 이는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되어 회담전략 수립에 반영되었다.

또한, 통일부는 홈페이지에 「2007 남북정상회담」 코너를 설치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상회담 후에는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 직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2007 정상회담 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사회에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뉴욕·LA·샌프란시스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일본 동경지역에 특별수행원을 파견하여 현지 의회인사·전문가·교민 등을 상대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였다.

3. 회담 경과

남북정상회담의 방북단은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하여 수행원 150명(공식수행원 13명, 특별수행원 49명, 일반수행원 88명), 기자단 50명, 지원인원 100명 등 총 300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10월 2일 아침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첫째날(10.2)】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출발하기에 앞서 아침 8시 45분 청와대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입장 등을 밝히는 대국민 인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이 행사 측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분단 이후 54년

만에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남북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를 출발한 지 1시간여 만에 군사분계선 30m 앞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였다.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대통령은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사분계선 북쪽에서는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비롯하여 이상관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김일근 개성시 인민위원장 등이 우리의 대통령 일행을 영접하였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달려 3시간여 만에 평양에 도착한 대통령 일행은 첫 번째 환영식장인 인민문화궁전 앞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오픈카를 타고 4.25 문화회관으로 향했고, 두 번째 환영식장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환영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오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하였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만찬사를 통해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상이자 우리 민족 성원 모두의 숭고한 사명” 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답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고 응답하였다.



남북 정상간의 첫 만남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남북 정상

【 둘째날(10.3)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전 9시30분 경 백화원 영빈관에서 소수의 배석자만 참석한 단독회담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우리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배석하였다. 북한측에서는 김양진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들은 정치, 대기업, 업종별, 사회단체·언론, 문화·예술·학계, 종교, 여성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북한측 관계 인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치분야 간담회(만수대의사당)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우리측 6명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북한측 8명이 참석하여 남북 국회회담 정례화 및 남북 정당간 교류 등을 논의하였다.

대기업 대표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우리측 6명, 한봉춘 내각 차관 등 북한측 6명이 참석하여 남북경협의 방향 및 확대·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업종별 대표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등 우리측 12명,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 등 북한측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환경 조성, 북한 지하자원 개발, 개성공단 활성화, 수산협력 등 제반 산업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단체·언론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우리측 7명, 안경호 6.15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측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산가족문제 해결 방안, 2008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남북간 언론교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화·예술·학계 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서는 이세웅 예술의 전당 이사장 등 우리측 10명과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등 북한측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를 통한 대화 창구 단일화, 개성지역 내 문화단지 조성 등이 논의되었다.



백화원 영빈관 기념 촬영

종교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우리측은 지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원장 등 4명이, 북한측은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종교시설 방문 등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우리측은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3명이, 북한측은 김경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여성교류 정례화, 여성계 협력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측 대표단 및 지원인원은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참관하였다. 이어 10시부터 12시 25분까지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우리측 주최 답례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입각하여 역사의 기회와 민족의 진로를 자주적으로 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날(10.4) 】

노무현 대통령은 남포시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조립공장과 다목적 방조제인 남포 서해갑문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함께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등 8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2007 남북정상 선언문 서명 부분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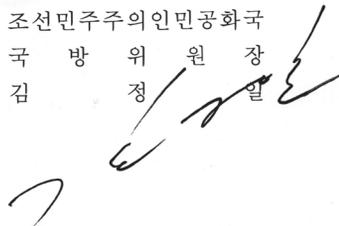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 환송행사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들러 현지의 공단 관계자들과 북한 근로자들을 격려했으며, 오후 9시경에 우리측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를 하였다.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남북정상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 4일 8개항으로 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2007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내용

-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
 -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 해결
 -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 강구

-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확고히 전환
 - 상호 내정 불간섭과 제반 문제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
 -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통일지향적으로 정비
 - 남북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 서해평화협력방안과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의를 위해 11월 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 추진을 위해 협력
 - 「9.19 공동성명」,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
- 남북 경험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추진, 우대조건과 특혜 부여
 -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해주경제특구 건설,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 개성공단 1단계 조속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 분야 등 협력
 -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및 백두산 관광 실시,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참가
- 남북간 인도적 협력 적극 추진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 금강산면회소에 쌍방 대표 상주 및 이산가족 상시 상봉 진행
 - 자연재해 등 재난발생시 적극 협력
-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협력 강화
-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총리회담 개최(11월 중, 서울)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 협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한 선언적 성격이었다면, 「2007 남북정상선언」은 정치·화해, 평화,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 분야 등 40여 개의 의제를 담고 있으며 그 의의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은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사안이다. 해주지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개발,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 이용,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 서해지역에 포괄적인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긴장과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군사적 대치’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평화번영벨트를 만들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조치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양 정상은 남북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을 명문화하였으며, 2000년 한 차례 개최된 후 중단되었던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재개에도 합의하였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시에는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으로 의제가 한정되었던 데 비해, 이번 정상선언에서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임무를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로 포괄 규정하였다.

둘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는 그동안 정부가 노력해 온 6자회담과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또한 양 정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 관계국과 논의하여 온 종전선언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평화체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의 위상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셋째,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분야 합의는 크게 남북경협의 장애를

해소하여 경협을 추진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의 경협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가운데, 신규사업을 통해 경협의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었다.

통행·통신·통관 등 개성공단 3통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며, 각종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명문화하고, 앞으로 남북경협 추진에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의 추진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660만㎡ 규모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와 문산-봉동간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을 개시하기로 하는 등 기존 남북경협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주지역의 경제특구 건설,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북한내 철도·도로 개보수와 공동이용,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다방면의 신규 경협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외연을 확대하고 장기적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되어 온 남북대화 총괄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그 산하에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분야별로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간 협의를 틀을 마련하였다.

제62차 유엔총회는 11월 1일 「2007 남북정상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에 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유엔총회가 「2007 남북정상선언」을 환영·지지하며, 충실한 이행을 남북한에 권고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남북간 대화, 화해 및 통일을 위한 과정에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외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원동연 아태평화위원회 실장 등 일행 7명이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하며 남북협력사업 분야의 현장 시찰을 목적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측을 공식방문하였다.

양측은 남북협약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 실천이 남북관계 발전의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부는 정상선언의 신속·원활한 이행과 함께, 핵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 등 북핵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의 진전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제2절 남북정상회담 이전

1. 남북장관급회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당국간의 대화채널로 개설된 남북장관급회담은 총 21회 개최되었는데 참여정부 기간 중에만 12회(제10차~제21차)가 개최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중 심협의체로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6자회담이 남북장관급회담 일정과 맞물리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았고,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7년 2월 6자회담을 통해 「2.13 합의」가 이루어지고, 연이어 2월 15일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성사됨으로써 중단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다. 이후 제20차,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북한 핵문제 해결 촉구,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 인도주의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면회소 착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가.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우리측이 2007년 2월 12일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제의하자,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2월 15일 개성에서 실무대표접촉이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대표	유형호(통일부 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우리측은 중단상태인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고 정상화시켜 상호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으로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국면을 6.15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나.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재정(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유감을 표명하고 「2.13 합의」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인도적 사업의 신속한 재개, 2007년 상반기 중 열차시범운행 실시 및 연내 개통, 기 합의한 경제협력사업 및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제의하였다. 특히 남북의 철도개통이 남북 공동번영의 물적 토대가 되는 만큼 북한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한강하구 골재

채취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평양간 직선항로 개설, 정기항로 운항을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세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쌍방 당국이 민족대단합 실현에 앞장서며 다방면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장애들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의 개최, 상반기 내 열차시험운행 실시 등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간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
2.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
3.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
4.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이산가족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협력
 - 제5차 화상상봉: 3월 27일~29일,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5월 초순 금강산에서 실시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3월 9일(금강산)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4월 10일~12일(금강산),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해결
5.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4월 18일~21일(평양)
 -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 실시
 - 경추위 위원접촉 진행: 3월 14일~15일(개성)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6.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2007년 5월 29일~6월 1일(서울)

다.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재정(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우리측은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활성화, 철도개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편, 「2.13 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고, 진행중인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와 이미 합의된 여러 협력사업의 착실한 실천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여 갈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민족우선·민족중시 원칙의 견지, 국가보안법·합동군사훈련 등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중지, 3대 장벽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동 인식

- 2.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
- 3.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하기로 합의

2. 군사분야 회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는 2004년 5월 26일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시작으로 6회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16회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2006년 10월 핵실험 등으로 남북간 군사회담은 2006년 5월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이후 1년이 넘도록 개최되지 못하다가, 2007년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자 군사회담도 재개되었다.

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5차~제6차)

(1)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18~22, 평양)에서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논의하자고 수정·제의해왔다. 이에 우리측이 동의하여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정승조 (국방부 소장)	김영철 (인민무력부 중장)
대표	문성목 (국방부 대령) 길강섭 (국방부 대령) 김왕경 (국방부 대령) 심용창 (통일부 과장)	박림수 (인민무력부 대좌) 김응철 (인민무력부 상좌) 리선권 (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 (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및 임진강 수해방지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서해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서해 해상경계선,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 허용 문제, 제주해협 통과문제, 북한지역에 살포된 전단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고, 서해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군사적 충돌방지문제와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의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을 위해 서해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 지속 협의
 - 서해 평화정착 및 공영·공리 도모의 원칙에서 공동어로 실현
 -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관련 지속 협의
 - 서해상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 데 따라 해주항 직항로 통행문제 협의
- 남북 경제협력·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5.17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채택,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협의 지속
 -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기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및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
-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7월 중 개최

(2)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7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정승조 (국방부 소장)	김영철 (인민무력부 중장)
대표	문성목 (국방부 대령) 길강섭 (국방부 대령) 김왕경 (국방부 대령) 심용창 (통일부 과장)	박림수 (인민무력부 대좌) 김응철 (인민무력부 상좌) 리선권 (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 (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문제와 관련하여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정기시험통신 실시 등 실질적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동일면적·동일거리의 수역에서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운영하고, 서해해상에서의 평화가 정착되는 데 따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 완전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문제를 조속히 타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은 수용할 수 없고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 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문제는 이미 남한측 선박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으므로 남북간 해운협력 차원에서 즉각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간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이 종료되었다.

나. 남북군사실무회담(제29차~제31차)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협의한 서해해상 충돌방지문제, 공동어로 구역설정문제,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3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표	정진섭(합참 대령) 심용창(통일부 과장)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전창재(인민무력부 상좌)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7년 6월 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철도·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할 것과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과 한강하구 골재 채취 관련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남북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3국 어선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넓은 수역에 걸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비무장수역으로 하자는 등 서해 해상 경계선 재설정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7년 7월 10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와 관련된 문제 중심으로 협의할 것과 상대방을 직접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하며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는 실용적인 자세로 회담을 운영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방송, 뼈라 살포, 서해함대의 영해선 침범행위 등을 통해 우리측이 대북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관련 단체 해산·처벌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7년 7월 1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서해해상 경계선 문제는 현 북방한계선(NLL)을 존중·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에서의 군사분야 합의사항과 병행하여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과 관련하여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의 5개 수역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우리측이 5개 수역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NLL 이남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에 대한 쌍방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였다.

3. 경제분야 회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가 9차례 개최된 것을 비롯하여 철도·도로실무접촉, 개성공단실무접촉 등 총 57회의 경제회담이 개최되어 개성공단 건설, 남북 철도·도로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5년 7월 개최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계기로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방식의 경협사업이 추진되고, 농업·수산업·경공업·광업 등 경협사업의 범위가 산업의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5년 8월까지 경협 관련 13개 합의서가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되었고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및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이 2007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대표	고경빈(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성길영(통일부 국장)	방강수(민경협 국장) 량기건, 리영호(민경협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가 발효되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우선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부터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열차시험운행과 우리측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수석대표 접촉 등을 진행하면서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문 없이 회담이 종료되었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 실시일정부터 확정해야 하며,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현지조사와 함께 병행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함께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현지조사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대표	홍재형(통일부 상근회담대표) 김중태(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오정규(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성길영(통일부 국장)	조현주(민경협 실장) 방강수(민경협 국장) 리영호(민경협 참사)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이에 대해 북한측은 식량차관 제공 문제부터 우선 합의하자며, 우리측이 제기한 열차시험운행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다가 입장을 바꿔 열차시험운행 직후에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경공업 원자재는 6월 말부터 제공한다는데 합의하고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회의

합의문 요지

1. 5.17 열차시험운영, 빠른 시일 내 철도·도로 개통, 제13차 철도·도로 실무접촉 개최(4.27~28)
2.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제공, 6월 중 현지공동조사 실시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 이를 위해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개최(5.2~4)
3. 5월 중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최
4. 제3국 공동진출 관련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
5. 5월초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6. 한강하구 골재채취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실무접촉을 개최, 추진
7. 자연재해방지,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
8.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적인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7월 중 남측 지역에서 개최

나.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제1차~제2차)

2007년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2차례(4.27~28, 5.13)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량기건(민경협 부국장)

우리측은 1차 접촉(4.27~28)에서 열차시험운행에 관한 절차문제를 타결한다는 입장으로 회담에 임하였으나, 북한측이 군사적 보장조치 이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여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5월 13일 추가접촉을 진행하였다.

5월 11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자 5월 13일 2차 접촉에서 쌍방은 참석자 규모, 기자단 취재협조문제 등 쟁점사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쌍방은 승차인원 규모를 우리측 100명, 북한측 50명으로 합의하고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명칭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날짜 : 2007.5.17
2. 참가인원 : 남측에서 100명, 북측에서 50명, 참가급 : 장관급
3. 열차시험운행 시간 : 10:30~15:30,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 진행
4. 시험운행 구간 : 경의선은 문산역-개성역, 동해선은 금강산역-제진역
5. 시험운행 방식 : 각기 자기 측 기관차에 객차 5량씩 연결

경의선은 북측 인원이 남측으로 와서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이동
동해선은 남측 인원이 북측으로 가서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 이동

다.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제2차~제3차) 및 이행기구 실무협약(제1차~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18~22)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가 채택되고,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협약이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웅희(통일부 경험기획관) 김형석(통일부 경험기획관)*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김 민(산업자원부 남북산업자원총괄팀장) 김병호(통일부 팀장) 이송배(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총괄지원부장)**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정주표(경공업성 방직관리국장) 리광순(경공업성 신발관리국장) 허성일(경공업성 일용품국장) 안승수(전 명지총회사 총사장) 등

* 제2차 이행기구 실무협약(7.5~7)시 교체참가, **제1차 이행기구 실무협약(6.7~8) 이후부터 참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 진행된 실무협의를 통해 쌍방은 섬유·신발·비누 등 품목별 원자재 가격, 당해연도에 3% 대가 상환, 지하자원 현지조사 및 절차문제 등에 대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였다.

(1)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이 2007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과 관련하여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기준으로 하되, 원자재 중 일부는 1차 가공품 내지 반제품으로 하여

1항차는 6월 27일 인천-남포간 정기항로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검덕 아연 광산,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6월과 8월 중 2차례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FOB(Free On Board) 기준으로 하고 원자재는 1차 가공품이 아닌 생원료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검덕 아연광산, 대흥·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외에 가공공장, 항만·철도·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투자개발을 제의하였다.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 단섬유 500톤을 6월 27일 인천↔남포간 정기 해상수송을 통해 제공
2.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3.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
4. 단천지역의 검덕광산, 룡양광산, 대흥광산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5. 제3차 실무협의를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

(2) 제3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제3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협약이 2007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CIF 기준으로 할 것이며, 신발과 비누 등

일부품목은 생산여건을 감안하여 1차 가공품 내지 반제품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해연도에 상환하기로 되어있는 3% 대가상환 문제와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2차 현지공동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부대비용은 남한측이 부담해야 하므로 원자재 가격은 FOB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납기를 조속히 확정하고, 원자재 형태도 1차 가공품이 아닌 생원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제1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약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우리측 이행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한측 이행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명지총회사간 제1차 실무협약이 2007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우선 6월 27일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제1항차 단섬유 500톤에 대한 가격절충을 시도하였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협의를 종료하였다.

(4)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약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이행기구간 실무협약이 2007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원자재 제공에 따른 부대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측이 원자재 가격과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 국내의 시장가격에 따른 경공업 원자재 가격을 대부분 수용하고, 비누와 신발 원자재를 반제품 또는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도 호응해왔다.

이에 따라 쌍방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경공업 원자재 제공

- 남측은 북측에 2007년중 미화 8,000만 달러(의복류 \$2,700만, 신발 \$4,200만, 비누 \$1,100만)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
- 남측 기술지원단 10명 구성, 북측 경공업 공장 1차 현장방문(8.7~11) 및 추가 3회(9월, 11월, 12월) 실시

2. 원자재 대가 상환

- 경공업 원자재 대가 3%(아연과 및 마그네슘크링카)는 2007년중 2회(원자재 50% 및 100% 제공시점)로 분할하여 상환
- 잔여분은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환

3. 지하자원개발 협력

- 북측은 검덕, 대흥, 룡양 등 3개 광산에 대한 자료 제공(7.19) 및 제1차 현지 공동 조사(7.28~8.11, 남북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실시
- 북측은 현지공동조사, 기반시설조사 등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적극 지원

라.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제1차)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이 2007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한중희(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 부단장)	한명철(민화협 참사)
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승신(청와대 과장) 유재필(국무총리실 과장)	문춘원(연유총국) 리인철(해상운송총국 대외사업국 과장) 안해란(연유총회사 연구원) 김태이(민화협 참사)

우리측은 경제에너지협력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기준의 세부사양에 따른 중유 제공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북한측은 가열설비가 준비되지 않는 등 내부사정을 설명하면서 응고점 10℃ 이하의 중유 지원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시한 사양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품질은 아니나, 가능한 한 사정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협의에 임하였다. 수송일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으나 생산 등 내부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설명하였다.

쌍방은 중유 인도·인수 절차에 대해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2.13 합의」에 따라 긴급 에너지 지원으로 1차분 중유 5만톤을 북측에 무상 제공
 - 남측 인도기관은 통일부, 북측 인수기관은 민경협으로 지정
 - 제공되는 중유 품질은 유황 함유량 2.5%, 응고점 10℃ 이하, 항구별 수송량은 선봉항 35,000톤, 남포항 15,000톤
2. 첫배 출항시기는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2주 이내의 빠른 시기로 하고, 출항 후 20일 이내에 나머지 분량의 출항을 위해 노력
 - 남측 인도기관은 수송선박, 수량 등을 매 출발 5일 전에 통보하고, 북측 인수기관은 매 출발 3일 전에 하역항 준비상태를 통보
 - 북측지역까지의 수송 및 항만비용은 남측이 부담, 하역비용 및 체선료는 북측이 부담

마.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제3차)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건 마련을 위해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2007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설동근(통일부 사업조정관)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표	정준희(통일부 지원총괄팀장) 이동연(통일부 팀장)	한명철(민화협 경제담당 부원)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4처장) 황명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6처장) 김철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우리측은 개성공단 1단계 건설 내실화를 위해 북한 근로자의 적기 충원과 숙소 건설,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통신공급합의서 체결, 통근 및 화물수송 열차운행 등을 제시하는 한편, 2단계 개발을 조기 착수하기 위한 측량·지질조사를 연내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실질적인 의제와는 상관없는 국무총리의 헌법 영토조항 관련 발언내용(2.13)과 양영희 판사의 논문(통일정책사법연구 1권) 내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등을 시비함으로써 쌍방은 실질적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4. 사회문화분야 회담

참여정부 기간 중 사회문화분야 회담은 총 17회 개최되었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대표단 및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 「2004 아테네올림픽」에 남북선수단이 공동입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또한 「2008 베이징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이 2005년 제1차 회의 이후 2007년까지 4차례 진행되었다.

한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24)에서 합의한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회의를 2005년 9월부터 2007년까지 4차례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등도 개최되었다.

가. 2008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2007년 2월 5일 북한측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4차 체육회담을 2월 13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동의하여 제4차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정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문재덕(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대표	홍양호(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오영우(문화관광부 국제체육팀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정해만(조선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박일남(조선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김영철(조선올림픽위원회/아태참사)

우리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고안과 베이징올림픽 예선전 개시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예선전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일팀을 구성하되 단일팀은 '경기력 위주'로 구성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북한측은 단일팀 구성의 근본 목적은 6.15 시대에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동수 구성원칙'을 되풀이 하였다.

쌍방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입장을 검토한 후 추후 연락하여 차기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제4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제3차 실무접촉 이후 안중근의사 유해매장 추정위치 공동조사가 2006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2007년 3월 22일 우리측은 현장조사결과 분석자료의 상호교환, 유해 매장지역 특징, 유해매장 예상지역 보존 및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으로 중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

한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4월 10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병구(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표	김계진(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김영란(통일부 팀장)	김창규(민화협 참사)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쌍방은 현장조사결과 분석자료를 상호교환하며 가장 유력한 매장 추정지를 '여순감옥 뒷산 일대' 로 특정하고 4월 말부터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발굴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중국정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관련 구체적 사항들은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안중근의사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 및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순감옥구지(舊地) 뒷산 일대' 를 유해발굴 우선 대상지역으로 확정
2. 유해 공동발굴단은 우선 1단계로 4월 하순부터 약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 시·발굴을 실시
3. 남북은 발굴 장소 보존조치 등 중국측에 요청할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공동으로 협조 요청
4. 남북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관련 구체적 사항은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다.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우리측은 2007년 3월 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

해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제를 위한 지원의사를 전달하였다. 남북은 방역관계자간 실무접촉과 관련한 의견교환을 거쳐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을 3월 30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대표	김충환(통일부 지원협력팀장) 주이석(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김창규(내각사무국 과장) 권정혁(중앙수의방역소 책임검사원) 리순학(내각사무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제역 확산 범위와 혈청 등 관련자료 및 우리측 방역전문가의 기술지원과 현장방문 실시 등을 요구하였고, 북한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쌍방은 지원물품의 구체적인 전달시기 및 현장방문 시기 등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해 마무리짓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라.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실무접촉

북한측은 2007년 4월 5일 우리측에 참나무시든병과 송충병 구제에 필요한 약품과 기술적 자료 제공을 요청해왔다. 이에 우리측에서 4월 11일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알리고 쌍방 산림병충해 방제관계자간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5월 8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오기표(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장)	량기건(민경협)
대표	김충환(통일부 지원협력팀장) 신상철(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장)	최정호(국토환경보호성 산림보호처장) 장국일(민경련 정책실 참사)

우리측은 솔나방·솔잎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북한측은 우리측 방제전문가가 북한내 산림병충해 발생 현장을 방문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물품의 지원시기는 우리측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5. 인도분야 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은 참여정부 기간에도 연 1~2회 개최되어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화상상봉 추진, 북한 수해복구 지원 등 인도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병행하였다. 특히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발생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긴급구호품·의료품, 복구 자재·장비 등을 조속히 전달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였다.

2007년도 들어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제6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추진을 위한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에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남북 적십자단체간 실무접촉을 2007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대표	황정주(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건설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와 함께 북한측의 화상상봉센터 건설 지원문제 등 인도적 협력사업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회담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여 3월 10일까지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3월 21일부터 진행
2. 면회소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기 필요한 인원의 연락체계를 구성·운영
3. 쌍방은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남측은 북측에 화상상봉센터 건설 설비자재 및 물품구입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재들의 제공을 3월 말부터 시작

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7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부위원장)
대표	홍양호(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김남중(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최상규(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은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서기장)

우리측이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은 국군포로·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였다. 쌍방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 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대면상봉 및 화상상봉과 시범적 영상편지 교환에 합

의하고, 북한측의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올해 8.15와 추석을 계기로 화상상봉 실시(남북 각기 40가족)
2.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남북 각기 100가족)
3. 추석 계기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
 - 이미 상봉한 바 있는 남북 이산가족 각기 20가족
 -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
4.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
5. 북측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6.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0월 말 경에 금강산에서 개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제3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1. 남북총리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2007년 11월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총괄 조정협의체였던 남북장관급회담의 역할을 격상시켜 쌍방 총리급이 남북관계 전반을 관장토록 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2007 남북정상선언」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회담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국무총리 훈령 제501호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유관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종합기획단」과 「이행사무처」를 구성하여 남북총리회담 대책과 협상전략을 준비하였다.

가.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제1차~제3차) 및 분야별 실무협의(제1차)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접촉이 2007년 10월 26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차관)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대표	홍윤식(국무총리실 심의관) 유형호(통일부 국장)	김정삼(내각사무국 참사) 박용일(아태평화위원회 참사)

접촉에서 총리회담 개최시기와 대표단 구성, 왕래경로 등 주요 절차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가로 제2차(11.9) 및 제3차(11.11) 예비접촉을 통해

나머지 절차문제와 총리회담 의제문제를 집중 협의하였다.

한편, 11월 10일 부문별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총리회담 의제 등 정상선언 이행과 관련,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쌍방의 구상과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다.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접촉 결과

1.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2.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7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 및 지원인원은 40~50명으로 구성
3. 의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문제
4. 회담 운영에 있어 필요시 분야별 접촉도 진행하며, 왕래경로는 서해직항로(항공편) 이용
6. 회담기록, 신변안전, 교통, 통신, 편의제공 등 기타 제반 절차문제는 남북회담 전례를 준용
7. 차기 예비접촉은 11.6 개성에서 개최 (* 북한측 사정으로 11.9 개최)

나. 제1차 남북총리회담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한덕수(국무총리)	김영일(내각총리)
대표	이재정(통일부 장관) 임영록(재정경제부 차관) 오영호(산업자원부 차관) 이춘희(건설교통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서 훈(국가정보원 3차장)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백룡천(내각사무국 부장) 박호영(국토환경보건성 부상)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박정민(보건성 국장)



제1차 남북총리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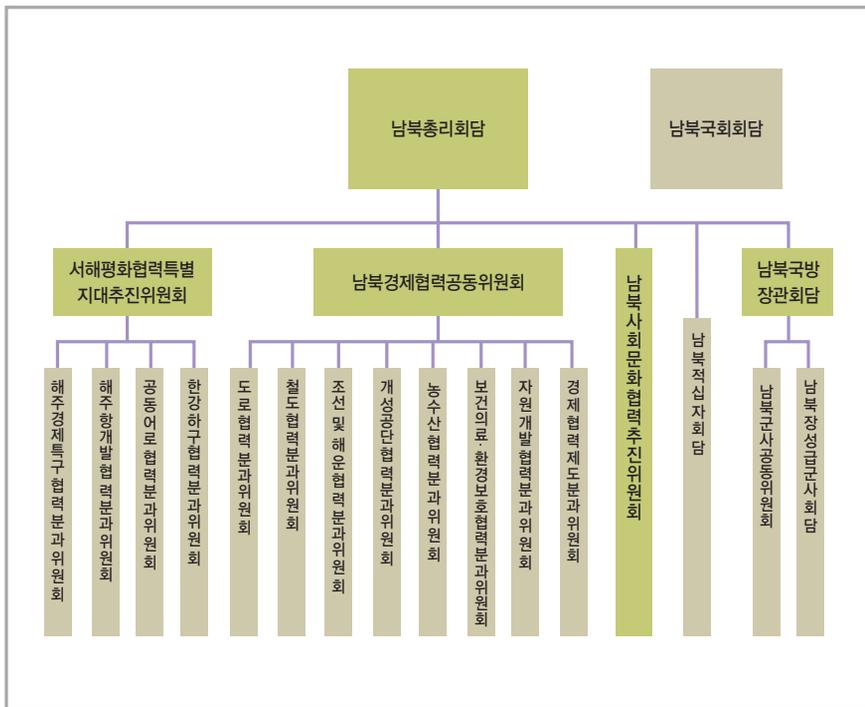
우리측은 「2007 남북정상선언」을 조속히 실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겨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협력사업을 내실화·활성화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백두산 관광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문제를 비롯하여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평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 동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해주 경제특구개발, 해주항 활용,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5개 세부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및 공동이용, 조선협력사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등 정상선언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동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2건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총리회담 이후 남북회담 추진체계도



합의서 요지

1.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이행
 - 금강산면회소 사무소 개소식(12.7),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12.11) 등 연내 사업 실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 활성화, 조선협력단지 등 중점과제에 대한 사업 방향과 추진 일정 구체화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별도 협의기구 구성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분야별 협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해주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 이용, 해주직항로 통과 등에 대한 추진일정 합의
3.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합의
 - 통행(출입시간 확대 : 07시~22시)·통신(인터넷, 유무선 전화 등)·통관(물자하차장 건설 등) 문제 개선, 12.11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 개시, 2008년 2단계 개발 착수하고, 12월 중 측량·지질조사 실시
4. 경제협력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심화
 - 2008년부터 경의선 철도·고속도로 개보수 추진(2007년 중 현지조사)
 - 2008년 상반기에 안변에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 착수, 남포시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건설 등 추진
 - 자원개발·농업·보건의료·수산·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사업 방안에 합의
5.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 협력의 확대
 -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 영상편지 시범교환, 상시상봉 실시 합의, 제9차 적십자회담 개최(11.28~30, 금강산)

2. 군사분야 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쌍방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준비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3차례 진행되었으며, 제2차 국방장관회담 이후에는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1회, 장성급군사회담이 1회 개최되었다.

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이후 7년 만에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에서 11월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장수(국방부장관)	김일철(인민무력부 부장)
대표	정승조(국방부 중장) 박찬봉(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조병제(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문성목(국방부 대령)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허찬호(인민무력부 소장) 리인수(인민무력부 소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북한측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주특구,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관할해오고 있는 구역을 존중하도록 한 점을 상기시키고, 우선적으로 서해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선언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쌍방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 적대감 조성행위 금지, 기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 철저히 준수
 -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체계 현대화 및 상호 연락채널 확대
2.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
 - 해상경계선 문제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군사공동위에서 협의
3.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문제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협의
 -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 설정
 - 서해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군사공동위에서 협의
4.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협력
 - 전쟁시기의 실종자 유해발굴 추진대책을 협의·해결
5.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즉시적 군사보장대책 수립, 12.11 철도화물수송 개시를 군사적으로 보장
 - 서해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한 군사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백두산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보장조치 마련
6.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 2008년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서울), 군사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

나.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7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홍기(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이상철(국방부 대령) 정진섭(국방부 대령) 황봉연(통일부 팀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쌍방은 사전에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 합의를 우선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매일 07:00~22:00까지 상시적 통행 보장
 - 일요일 등 공휴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
2.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 허용
 - 통신센터 건설 및 운영방식 등은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
3. 선별검사 방식 등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검사장 신설·확장

또한 우리측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과 관련 공동어로구역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이에 북한측은 우선 NLL과 북한측이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할 것과, 평화수역이 설정되기 전에는 현장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여 쌍방은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남북군사실무회담(제32차~제35차)

제32차·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절차·의제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고,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 합의를 마련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대표	이상철(국방부 대령) 황봉연(통일부 과장)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11월 12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는데, 쌍방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실무절차·회담의제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각 초대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측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11월 20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으며, 쌍방은 남측 대표단 규모는 30명 수준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통신회선 구성문제 등 기타 실무적인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11월 2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북한측 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12월 5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한 군사보장 합의서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 상호 입장을 절충하여 2007년 12월 11일부터 실시되는 철도화물수송을 위해 남북관리구역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 통과 24시간 전 관련사항 통보 등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마련하였다.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합의서 요지

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위해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 개방
2. 통과 24시간 전에 인원 명단, 열차 현황 등을 상대측에 통보
3. 열차는 최저 20m/h, 최고 60km/h로 운행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출입 및 세관 심사 등 실시(세관심사에 필요한 설비·자재 지원문제는 추후 협의)
4. 열차운행구간에서 사진촬영 금지, 통제품·금지품 등 철저히 준수

3. 경제분야 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의 중심협의체로서 기존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철도, 도로, 개성공단, 보건의료·환경보호, 농수산, 조선·해운, 경협제도, 자원개발 등 8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농수산·개성공단분과위원회 등 총 12회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권요규(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전승훈(내각 부총리)
대표	김중태(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용근(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유영학(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원인희(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이재균(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박봉식(통일부 국장)	백룡천(내각 사무국 부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박철수(민경협 부국장) 박용일(조평통 서기국 참사)

우리측은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고,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지하자원개발 협력, 농수산,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분야별 협력과제들을 협의·확정하며, 추가적 협력과제로서 평양에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설치, 세계은행의 북한 경제인력 교육훈련사업,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중장기 남북경협 발전계획 공동연구, 대북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분야의 협력의제들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에 대해 북한측은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 협력과제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의제들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부문별 분과위원회 일정 등을 중심으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철도·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력
 - 도로협력분과위('08.2.12~13, 개성) 및 철도협력분과위('08.1.22~23, 개성) 개최
2.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협력
 - 2차 현지조사 : 12월 11일부터, 「조선 및 해운분과위」 개최(12.25~28, 부산)
3.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 해결
 - 12월 17일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사 시작, 개성공단분과위 개최 (12.20~21, 개성)
4.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
 - 남북자원개발 분과위 제1차 회의(2008년 1월, 개성) 개최, 제3차 단천지역 광산

현지조사(12.20~26)

- 5.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 종자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위해 현지조사(12.21~25) 실시
 - 농수산협력분과위(12.14~15, 개성) 개최
- 6.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
 - 실태조사 실시, 약솜공장 건설 우선 추진
 - 환경보호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등을 2008년부터 추진
 - 보건의료·환경보호 분과위(12.20~21, 개성) 개최
- 7.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제제도분과위 구성 및 제1차 회의(2008.4월 초, 개성) 개최
- 8.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

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1차 예비접촉

(1) 제1차 예비접촉

「2007 남북정상선언」 및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예비접촉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기간 중인 2007년 12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대표	이동욱(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장) 손명선(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장) 이안호(해양수산부 남북협력총괄팀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용일(조평통 서기국 참사) 김광일(남북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우리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일정, 대표단

구성 등 제반 실무절차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사업이행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촉박한 준비 일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부족 등으로 실무적 문제들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예비접촉은 주로 우리측에서 사업추진 구상과 현지조사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백종천(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박송남(국토환경보호상)
대표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김영과(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진 흥(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박상규(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김춘선(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정순(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일영(수산성 국장) 강종관(육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 기사장) 김광운(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임룡철(조평통 참사)

우리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사업비전을 설명하고 구체적 추진방안과 일정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업계획과 현지조사문제는 추후 분과위원회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확정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해주경제특구 및 해주항 개발 등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사회담에서 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설득하였다.

쌍방은 우선 사업추진이 용이한 해주지역 현지조사 및 실무접촉 일정과 제2차 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서 요지

1.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를 통해 점차 확대 개발
 - 2008년 상반기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구체적 사업계획, 시범단지 조성 및 착공식,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등 협의
 - 해주지역 현지조사를 2008년 1월 31일 경 실시, 조사단 방문관련 실무접촉을 2008년 1월 개성에서 개최
2.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개발하고 활용
 - 해주항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
 - 2008년 상반기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이 설정되는 데 따라 공동어로 실시
 - 2008년 상반기 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 구체적 공동어로 실시 방안, 공동어로구역 관리운영문제,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 협력방안 등 협의
4.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
 - 2008년 상반기 안으로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 한강하구 현지조사, 골재채취 실시방안 및 공동이행기구 설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5. 2008년 상반기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제2차 회의 및 4개 분과위원회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

다.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박현출(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리만성(농업성 국장)
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임송학(해양수산부 남북수산협력팀장) 허진봉(국무총리실 과장)	박인건(수산성 국장) 량기건(민경협 부국장) 고창림(수도건설위원회 기술국장) 전석조(농업성 과장)

농업분야에서 우리측은 종자가공 및 처리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사업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결정할 사안이고, 북한측이 제기한 동식물 검역문제는 북한 지역을 질병 청정지역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종자가공 및 처리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2007년 12월 25일 이전에 착공해야 할 것이며, 청정화 지역문제는 북한과 국제기구 간의 문제로 남북간 협력사업이 아니며 남북간 검역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수산분야에서 우리측은 동해수역 어장은 은덕어장 외에 북한측의 동해 50해리 직선 기선 바깥수역을 조업지역으로, 입어로는 동해어로수역을 확정된 후에 협의할 것과, 종묘배양장 건설은 인공적인 방식보다 자연적인 종묘생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은덕어장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측이 희망하는 다른 어장도 검토할 수 있으며, 입어로 제공수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 후 세부적 문제는 실무접촉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종묘배양장 건설은 인공 종묘배양장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 협의한 후 농업 및 수산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방향을 담은 합의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조속추진
 - 현지조사 : 12.21~25, 규모 20명,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 조사
 - 북한측은 기초자료 및 편의보장, 남측은 설비·물자 제공
 -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 종자, 유전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기술협의 개최
2. 검역체계 확립 및 관련협력 추진
 - 정보 상호교환, 중요 검역소 검사·소독장비 현대화, 가축 예방·진단·치료약품 등 협력
 -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3. 과수·채소·잡업·축산, 농업과학기술 협력 추진
4. 수산분야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
 - 2008년 중 북한측 동해어장의 일정수역에서 남한측 어선 입어 및 어로 진행
 - 수산물 생산,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 협력 추진(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실시)
 -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적극 협력
 -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5. 농수산물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최보선(통일부 사업조정관)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표	이용석(정보통신부 협력기획팀장) 정준희(통일부 지원총괄팀장) 박문태(통일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4처장) 황명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6처장) 윤승현(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우리측은 군사실무책임자 접촉('07.12.13, 판문점)에서 군사적으로 보장한 3통문제 개선사항을 재확인하고 실시시기를 확정하는 한편, 북한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위한 숙소건설, 출퇴근 도로 개보수, 통근열차 운행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3통문제는 군사당국간 이미 협의하였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별도로 협의할 내용이 없으며, 숙소 및 출퇴근 도로, 물자 하차장 등 건설분야 의제에 대해서만 개별 합의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합의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연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통행 보장
2. 통신센터 완공, 인터넷 및 유무선 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
3. 통관절차를 선별검사로 빠른 시일 안에 간소화, 물자 하차장을 2008년 중에 건설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4. 북측 근로인력의 적기 충원 보장을 위해 1만 5천여 명 규모의 숙소 착공('08년 상반기)
5. 북측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
 - 개성-평양 고속도로 연결 진입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08년 1월 중)
 - 2008년 개성공단 근로자의 통근열차 운행
6. 개성공단협력분과위 제2차 회의 개최('08년 2월 중, 개성)

마.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4~6) 합의에 따라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창진(보건복지부 차관)	리봉훈(보건성 부상)
대표	이재홍(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양창석(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 윤영균(산림청 자원정책본부장) 최상규(통일부 국장)	김영철(국토환경보호성) 장준상(보건성 국장) 림춘철(국토환경보호성) 김영희(민화협 부원)

보건의료분야에서 우리측은 도병원 현대화·약솜공장·전염병 공동방제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심장병원 지원, 주사기 공장·제약공장 건설 등 보건의료장비 협력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산림분야에서 양묘장·산림녹화·병해충 방제 등 쌍방이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은 사업지역·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환경분야 협력사업에서 관심도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황사피해 등 대기오염 피해방지 사업, 한반도 생물지 사업, 환경보호센터사업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의견이 접근된 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당국간 시범협력사업, 공동조사 및 실무협의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은 차기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보건의료 협력사업 적극 추진

- 2008년에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사업 시범 진행, 도병원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8년 상반기 중 약솜공장 건립 착수,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
- 전염병 통제를 위해 예방약, 냉장운반장치, 진단시약, 치료제 등을 지원하고 전염병 공동퇴치를 위해 노력
- 사리원 도인민병원 지원, 약솜공장 건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008년 1월 중 실시, 사업기간 중 기술실무진의 현장방문 보장

2. 환경·산림분야 협력 적극 추진

-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공동연구사업 추진, 2008년 2월중 평양에서 실무협의 개최
- 황사 및 대기오염 피해 축소를 위해 2008년 중 평양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설치, 그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실무협의 개최
- 환경보호센터·한반도 생물지 사업 중요성 인식, 2008년 4월 개성에서 실무협의 개최
- 사리원 지역에 양묘장을 조성, 2008년 3월 중 공동조사 실시
- 산림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조사 및 방역 실시,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3. 제2차 회의는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

바.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최평락(산업자원부 기간제조선업본부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대표	김우철(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장) 김충환(통일부 교역물류팀장) 허진봉(국무총리실 과장)	맹인섭(육해운성 조선국장) 한명철(민화협 참사) 리상덕(육해운성)

조선협력분야에서 우리측은 조선협력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조선협력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008년 상반기 내에 조선협력 부지를 선정하고 단계적 건설계획 수립, 전력, 용수 등에 대해 실제적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측이 제의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는 경협제도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해운협력분야에서 우리측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허용에 따른 통항질서 준수문제를 강조하고, 장거리 직접통신문제, 해난구조기관장 직통연락망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해주직항로 통과는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우리측의 통항절차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제3국 경우 북한선박의 남북항로대 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안변과 남포지역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등 해운협력사업과 관련한 제반 문제 계속 협의
2.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2008년 1/4분기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개최
3.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각기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

사.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및 남북철도운영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이 2007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협기획관)	박정성(철도성 국장)
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철호(철도성 부국장) 황삼린(철도성)

우리측은 12월 11일부터 화물열차 정례운행 개통,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방안, 열차운행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열차운행의 점진적 확대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화물열차 정례운행과 열차운행 확대는 국방장관회담 이후 협의·확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또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에 국한하고 여객운송과 동해선 열차운행 부분은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
2.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위원 명단을 11월 중에 교환,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진행
3.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
 -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운행, 화물수송량 확대에 따라 횟수 증대
 -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계기로 남북열차운행 점차 확대
4. 개성-신의주간 철도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현지조사 진행
 - 2007년 12월 12일~18일 개략조사 진행, 2008년 초에 구체적인 정밀조사 진행

(2)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호성(통일부 출입총괄팀장)	김철호(철도성 책임부원)
대표	박영수(건설교통부 서기관) 김난영, 전철중, 유학곤(통일부 사무관) 강승룡(국방부 중령) 변현진, 윤양수(한국철도공사 팀장) 임재익, 임동춘, 박대희(한국철도공사 부장)	황상린(철도성 부원) 석영철(철도성 부원) 림영두, 김만선, 강순덕, 장철수, 김영호, 리룡국, 김철준

쌍방은 화물열차 운행횟수 및 열차편성, 화물 취급절차, 화물운임 등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정례운행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그 합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채택하였다.

쌍방은 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매일 1회 왕복하고, 운행열차는 총 12량으로 편성하며, 매일 오전 9시 도라산역을 출발, 9시 30분 판문역에 도착하여 화물 상하차 작업 후 오후 2시 판문역을 출발하여 귀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화물운임은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르며, 적용화폐는 유로화 또는 미 달러화로 합의하였다.

아.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이 2007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험기획관)	강수진(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대표	유인상(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성일(민경협 부위원장) 김성호(민경협 참사) 리용국(민화협 참사)

우리측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2008년 내 착공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완공하자고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은 2008년 상반기 내 착수하여 1~2년 내 완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이 개보수를 계기로 경협 및 지원물자의 수송, 남북행사 참가 등 다양한 공동이용 방안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은 총리회담 등 상위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현지조사 일정과 관련 우리측이 1차 개략조사를 12월 중순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정밀조사를 2008년 초에 실시하자고 제시한 데 대해, 북한측은 12월 중 현지조사를 완료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여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2008년 중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완공
2.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현지조사(남북 각 20명)를 2007년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완료하고,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시 쌍방의 합의하에 추진
 - 남측은 현지조사를 위한 인원, 기재, 측량설비 등 보장, 북측은 필요한 관련자료 및 편의제공
 - 전반적인 도로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 공동작성
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 개최

자.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제1차~제2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05.8, 개성)에서 합의한 농업협력사업을 협의·추진하기 위해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두차례(11.5, 12.18)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1차	수석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김영철(조평통 서기국)
	대표	김경규(농림부 구조정책과장) 이동언(통일부 팀장)	김영희(민화협 참사) 리학철(농업성 축산관리국)
2차	수석대표	배광복(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장)	전호연(농업성 축산관리국 사무장)
	대표	이천일(농림부 농업정책과장) 허진봉(통일부 팀장)	김영학(농업성 축산관리국) 림룡철(아태평화위원회 참사)

(1) 제1차 실무접촉

우리측은 시범 양돈협력사업은 차관방식의 유상지원으로 할 것과 사료의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육로수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북한측은 유상지원 방안에 동의하고 사료의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한 육로수송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합의서에 명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쌍방은 이견이 있는 육로수송방안은 추후 이행기구간 논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시범 양돈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평양 강남군 일대에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의 시범양돈 협력사업 진행
 - 총괄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 2007년 11월 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답사 실시
2. 남측은 자재 및 장비·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지원, 차관합의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체결, 구체적인 지원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사항은 쌍방 이행기구가 협의
 - 북측은 토지·전력·용수·노동력 등 제공,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 남측 인원들은 사업현장 방문, 기술지원
3.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2007년 중에 개성에서 개최

(2) 제2차 실무접촉

우리측이 신축 양돈장 규모를 부지면적 45,000㎡, 건물면적 11,000㎡ 내외로 제시하자, 북한측은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고, 시범 양돈협력사업 이행기구로 「농업성 축산관리국」을 선정·통보하였다.

쌍방은 양돈장 시설 건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 장비의 차관제공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총 사업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북측에 연산 1천톤 규모의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2.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
 - 차관 공여 및 상환은 「南 한국수출입은행 ↔ 北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따름.

3. 자재·장비의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설정

- 수송비용 관련, 육로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장소까지, 해로의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수송은 남측이 부담하고, 그 외 북측 지역 내에서의 수송·하역·항만비용과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

차.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접촉이 2007년 12월 25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강용태(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대표	정성태(통일부 서기관) 김훈아(통일부 사무관)	리덕수(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부국장) 한웅희(조평통 참사)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체계적 발전과 확대를 위한 금강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북한측 통행검사소 신축은 빠른 공법을 이용해도 16개월이 소요되므로 차후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통행검사소의 신축이 금강산관리위원회 설치보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행사무소 착공식 후 관리위원회 설립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남과 북은 관리위원회와 통행검사소 건립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재검토한 후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4. 사회문화분야 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큰 방향에서 합의하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사회문화회담 일정 및 협의의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관련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가.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이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험기획관)	한광일(기상수문국 처장)
대표	남재철(기상청 국제협력담당관) 김경식(기상청 기술기반정책과장) 황진규(통일부 과장)	최광국(기상수문국 중앙연구소 실장) 황철호(기상수문국 중앙연구소 실장) 현창건(내각 책임부원) 리영민(조평통 서기국 참사)

우리측은 기상정보 공유를 위해 전용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상전용통신망 개통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북한측은 직접적인 논의를 회피하였다. 쌍방은 북한측에 대한 지상관측장비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2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나.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관련 실무접촉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관련 실무접촉이 2007년 12월 28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우상일(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황철(민화협 부장)
대표	김문호(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권영진(통일부 과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책임부원) 김문규(문화성 무대예술지도국 부국장) 주광일(민화협 참사) 림대석(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응원단 규모가 확정되어야 열차, 숙소, 입장권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남북응원단 규모를 조속히 확정지을 것을 강조하였고, 북한측은 관계기관간 협의 후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주겠다고 언급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쌍방은 차기접촉을 2008년 1월 중 개성에서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5. 인도분야 회담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7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홍양호(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유광수(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정소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영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우리측은 2008년 상반기에 금강산면회소를 완공하여 면회소를 통한 상시 상봉을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 제시한 데 대해, 북한측은 대면상봉·화상상봉·영상편지사업의 정기적인 추진방안을 제의하였다.

금강산면회소 대표 상주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2008년을 기해 대표가 상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이 상주시점을 밝히지 않아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측이 제안한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북한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우리측이 총리회담 위임사항임을 강조하며 협의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이산가족문제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하는 방향으로 절충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 실시
 -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간 남북 각 400명씩 대면상봉
 - 분기별로 남북 각각 40가족씩, 1년에 남북 160가족씩 화상상봉
 - 2008년 「6.15 공동선언」 계기, 기 화상상봉자 중 남북 각 100명씩 특별상봉
 - 대면상봉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동반가족 1명 추가
2. 2008년 새해에 남북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 교환, 분기마다 기 상봉자 대상 남북 각 30가족씩 교환
3.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
4.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 참가
5.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